

## 오피니언

## 다산포럼

정지창



촌사람이 모처럼 서울에 올라갔다가 경복궁 역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역까지 가면서 창 밖으로 달리진 서울의 모습을 구경하게 되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거대한 성벽 같은 차단막에 가려져 있는 광화문 북원공사장의 모습이었다. 수많은 모자이크판으로 구성된 차단막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예술작품을 애써 강조하고 있었지만 인왕산, 북악산의 스카이라인을 깨끗이 하는 평지풀출의 인공구조물을 감출 수는 없었다.

다음에 눈에 들어온 것은 광화문 광장의 북쪽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스케이트장이었다. 흥겨운 음악 소리에 맞추어 수많은 사람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스케이트와 스케이트 보드를 타는 경관은 마치 환상 속의 놀이터인 양 멋져 보였다. 디즈니랜드의 한 부분을 세종로로 옮겨놓나!

“하늘에 조각구름 떠 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떠 있고/ 저마다 누려야 할 행복이 언

제나 자유로운 곳”, 그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그들은 외치고 있었다.

스케이트장에 이어 거대한 세종대왕의

시선을 확 끌어당기는 기묘한 불체가 나타났다. 나선 달팽이 모양의 그 조형물은 말로만 들던 올덴버그의 ‘스프링’이라는 작품이었다. 보아하니 수월찮은 돈이 들었을 그 작품은 영뚱하고 도발적이라는 점이 인상적일 뿐, 주변의 경관이나 시각적 맥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 광화문 광장의 스케이트장과 세종대왕 좌상, 이순신 장군 동상, 백남준의 비디오 기계는 도대체 무슨 문화적

미국(조선이 아니다)의 수도임은 관습헌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는가 하면,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고 정치인과 언론, 극우단체가 판사들에게 폭력과 협박을 일삼고 있지 않은가. 나는 버스에서 내리면서 결국 세종로의 기괴한 시각적 조형물들은 대한민국 문화의 시각적 표현임을 깨달았다.

우린 여기 함께 살고 있지 않나

거짓 민주, 자유의 구호가 넘쳐흐르는

이땅

고단한 민중의 역사

허리질려 뒤겨진 상처로 아직도 우는데

군림하는 자들의 배 부른 노래와 피의

채찍 아래

마른 무릎을 꺾고

우린 너무도 질기게 참고 살아왔지

우린 너무 오래 참고 살아왔어

아~ 대한민국 아~ 저들의 공화국

아~ 대한민국 아~ 대한민국

〈영남대 독문과 교수〉

※ 본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 NGO 칼럼

이국언



최근 일본 후생 노동성 사회 보험청이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으로 끌려가 강제노역을 한 광주전남지역 근로 정신대 할머니들에게 후생연금 탈퇴 수당으로 당시 액면가이며 99엔을 지급해 비난을 사고 있다. 99엔이라면 우리 돈으로 1천250원에 불과해 자장면 반 그릇 값도 안 되는 돈이다.

불과 13~14살에 끌려가 이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80대에 이르신 할머니들에게 99엔을 내미는 일본정부를 보고

정부 입장 표명이 허망하기 그지없다는 것은 바로 99엔이 어떻게 해서 지급되게 됐는지를 살펴보면 더욱 그렇다. 할머니들이 일본 사회 보험청에 후생연금 기업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한 것은 지난 1998년이다. 여기에는 일본 나고야에 있는 양식적 시민그룹 ‘나고야 소송 지원회’의 역할이 커다. 일본정부는 그 뒤 12년만인 지난해 비로써 미쓰비시중공업에 근무할 당시 후생연금을 납입한 사실을 인정했고, 그에 따라

## 정부 ‘99엔’ 침묵 왜?

도대체 뭐라고 해야 할까. 할머니들의 상실감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겠다. 99엔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에 대한 모독이다. 혹자는 99엔은 일본정부가 대한민국에 부여한 국격(國格)이라고까지 하고 있다.

그동안 말이 없다 싶었던 정부가 드디어 말을 열었다. 지난 22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일본정부에) 새롭게 외교적 이슈화하여 다시 협상하지는 않더라도 일본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를 기대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주후 일본정부의 태도를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과연 처음부터 외교적 협안으로 삼지 않겠다고 미리 꼬리를 내리는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국익 속엔 과연 일제 피해자들의 피땀을 찾아오는 것은 없는 것인가. “외교적 협안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고 미리 선수를 치는 정부 태도를 보고 과연 피해 할머니들은 무엇을 생각할까.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사무국장〉

## 기부문화 확산위해 제도적 보완·지원 필요

얼마 전 신문에 난 기사를 보니 최근 조사에서, 1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기부에 동참해 봤다는 비율은 턱없이 적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사회에 기부문화가 정착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식으로 2백억 원이 넘는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 사람에게 세무서로부터 140억 원의 증여세를 내리는 통보를 받았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이는 주식을 기부할 경우에 높은 세금을 매기는 현행법 때문이다. 또 개인이 돈을 출연해 기부 재단을 만들려고 해도 각

이번에 탈퇴수당을 신청한 것이다. 딜리 말하면, 액수를 차지하고 노구의 할머니들이 무려 12년에 걸친 사투 끝에 일본정부가 99엔을 내놓게 됐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 정부는 과연 무엇을 해 왔는가? 내일 모래를 장담하기 힘든 80대 고령의 할머니들이 와롭게 일본을 쫓아나니며 그 돈을 찾아오도록 해야 할 일일까 하는 것이다. 80대 할머니들이 받아올 수 있는 돈을 우리 정부는 왜 여태 못 받아 왔는가 하는 말이다.

얼마 전 국익을 우선한다며 삼성 이건희 회장도 특별사면해 줬던 우리 정부다. 대한민국 국익 속엔 과연 일제 피해자들의 피땀을 찾아오는 것은 없는 것인가. “외교적 협안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고 미리 선수를 치는 정부 태도를 보고 과연 피해 할머니들은 무엇을 생각할까.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사무국장〉

## 기고

## 문상필



며칠 전 백령도 앞바다를 포성이 뛰 흔들었다. 다행히 인명피해도 없었고 큰 무력충돌로 발전하지는 않았지만 한반도는 아직도 냉전의 한기운데를 걷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서해바다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953년 전쟁 직후 클락주 한 유엔군 사령관이 북한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상경계선이 NLL이다. 1973년 이후 북한이 백령도 등 서해 5개 섬 주변수역이 북한의 영토를 민족의 통일에 있다. 더구나 광주는 지난 10년 간의 민주정부를 탄생시킨 곳이고, 민주정부의 가장 큰 업적은 남북 간의 화해와 통일의 맡거름을 만든 것이다.

## 통일을 대비하는 광주는...

하면서 남북 간 충돌이 빈번해지게 되었고, 2000년대 들어서는 대규모의 충돌로 소중한 우리 군인들의 생명까지 잊어가게 되었다. 비록 NLL이 국제법적으로 영해를 규정하는 경계선이 아니라는 것이 국제법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하지만 우리 국민감정상 한 치의 땅과 바다도 내출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만장一致로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서해가 한반도의 화약고라면 반드시 그 문제를 풀어야 한다.

문제의 해답은 이미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10·4선언을 하면서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 를 위해 공동으로 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만약 10·4선언이 잘 이행되었다면 서해는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아니었을 것이다.

지난해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의 방북과 보스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냉전구도가 평화체제로 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냉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1월 4일 신년연설과 최근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여 ‘북한이 극한상황에 처했다거나 혹은 붕괴 직전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연내 정상회담을 언급했다.

〈광주 북구장애인복지회 이사장〉

## 은행 ATM기기 시각장애인용 설치 의무화 했으면

은행의 ATM은 일반인들에게는 아주 편리한 기계이지만 장애인들에게는 너무나 불편한 존재다. 시각장애인에게는 이어폰을 연결하여 안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음성 지원시스템과 점자형 키패드가 필요한데 이를 갖춘 곳은 거의 전무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도 지팡이를 든 시각장애인으로 보호자와 함께 ATM 기계로 다가와 점자 키패드가 있는 곳을 찾아 사용법을 익히는 것을 보았다. 그분은 점자 키패드가 있는

ATM 기계에 거주하니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했다.

앞으로 은행마다 새로 생기는 신생 지점이나, 혹은 장비를 교체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시각장애인용 ATM기를 설치토록 규정을 두어야 한다. 그렇게 점차적으로 시각장애인용 기기를 늘려간다면 며지않아 전국 모든 곳에 적절한 수자의 시각장애인용 ATM기기가 들어갈 것이다.

▲송은숙·광주 북구 풍향동

## 시설

## 지방선거 벌써부터 불·탈법이라니

6.2 지방선거가 오늘부터 시·도자사와 교육감 출마 예비후보자들의 등록을 시작으로 12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번 선거는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등 ‘1인 8표제’로 치러지며 광주·전남지역에서 1천여명에 이르는 후보자가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예비후보 등록에 따라 선거운동 폭이 확대되면서 후보 등록이 끝난 것은 선거가 탓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도 예외가 아니듯 벌써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하다 선관위에 적발되는 등 과열·혼탁 조짐을 보여 걱정이 앞선다. 광주·전남에서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적발된 선거법 위반사례는 170여건에 이른다. 광주지역 기초단체장 후보 7명은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하고 선심성 관광 등을 보낸 혐의로 경고조치를 받았다고 한다.

최근 ‘돈선거’ 추방 및 공명선거 추진 위원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진 화순군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돈선거의 악동에 시달리는 지역으로 이름이 나 있다. 중도 하차한 두명의 전직 군수도 선거와 관련된 금품수수가 문제가 됐다.

돈선거는 이제 후보자는 물론이고 유권자 스스로가 적발해야 할 선관과제라 할 수 있다. 민선 4기에서 당선된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 22명 가운데 8명이 각종 비리로 물려난 것은 돈선거 탓이다. 선거철만 되면 나타나는 공무원 출서기도 뿐만 아니라 회자되고 있다. 공직사회에는 “줄 한번 잘못 서면 4년, 재수 없으면 8~12년 동안 ‘좌천인생’을 면할 수 없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회자되고 있다. 선거가 끝난 뒤 단체장이 자신을 지지한 공무원에게 특혜를 주거나 때관매직을 일삼는 것은 이런 풍조를 더욱 부채질하는 요인이다.

공평한 선거는 무엇보다 유권자의 깨어있는 의식과 관심이 요구된다. 지방 선거가 오염되면 결과적으로 그 부메랑은 유권자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 ‘무늬만 경제자유구역’ 개선 시급하다

광양만 등 전국 6곳에 있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이 수립된다. 발전전략은 경제자유구역 청의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 것은 경제특구로서 제 역할을 하지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제자유구역은 글로벌 경제특구 유통을 위해 지난 2003년 지정됐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가 지지부진한 것은 각종 규제로 기업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는데다 세계 지원이 충분치 못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무엇보다 각종 개별법이 별도 적용됨에 따라 인허가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실제 개발계획 승인 및 실시계획 승인에 270일 가량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세가 감면되는 외국인 투자증정도 제조·물류업과 관광·

호텔업으로 제한돼 무역과 금융업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장적으로 확대하고 이같은 인센티브를 국내 관련기업에도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는 자칫 광역자치단체의 반발을 불러올 소지가 크다. 경제자유구역에 각종 권한을 부여할 경우 지금처럼 광역자치단체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사업과 예산 등을 독자적으로 편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시기적으로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과 맞물려 있어 적지 않은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는 기존의 행정체계를 유지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자유치의 효율성을 강조할 경우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 無等鼓

‘빵 셔틀’ 학교 폭력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금세 알아 들을 수 있는 말이다. 빵 셔틀은 이른바 ‘일진’ 학생들에게 매점에서 빵 심부름을 해주는 학생들을 일컫는다.

빵 셔틀의 대상이 되는 학생은 그나마 방학이면 안도한다. 방학 동안 만큼은 괴롭히는 학생의 얼굴을 볼 일이 별로 없어 시달림도 줄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계획’을 발표해 빵 셔틀과 같은 강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전학·퇴학 등의 징계

를 내리도록 전국 학교에 시달렸다.

겨울방학이 끝나고 초등학교부터 다시 문을 열기 시작했다. ‘일진’이 무서워 학교 가기를 겁내는 학생들이 있다면 걱정스러운 일이다. 학교 폭력을 없애는 것은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 모두의 책임이다.

‘OO 셔틀’은 학교에서 유포하는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강요 행위’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알게 해준 〈벽지경 사회부〉장인Park@kwangju.co.kr

## 光州日報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皓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 | 저자·지사·지국(구독신청